



# 거란국[遼]의 국가 성격과 외교 전략

홍성민\_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 목차 |

1. 머리말
2.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요의 '정치 중심지'
3. 요의 부족군 동원과 '약탈'
4. 송에 대한 외교 자세
5. 맺음말

# 거란국[遼]의 국가 성격과 외교 전략

홍성민\_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2023년 겨울, KBS(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을 시작한 대하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이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드라마의 전국 최고 시청률은 한때 10%를 넘었고, 동 시간대 1위를 달성하였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고려의 전쟁 상대인 거란국(요, 916~1125)이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는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부터 1019년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다루고 있다. 요(遼)는 993년 1차 침입과 다르게 2차와 3차에서는 고려에 전면적인 공세를 취했는데, 이는 1004년에 송과 체결한 전연의 맹(澶淵之盟)으로 후방을 공격당할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양국 간의 전쟁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연동하고 있었다.

거란족은 4세기 후반부터 역사 문헌에 등장하였고, 9세기 후반에 이르러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여러 부족을 통합, 재편하였다. 그는 당 말부터 오대(五代, 907~960)까지 혼란을 피해 거란 영역으로 망명한 한인(漢人)의 협력을 얻어 세력을 축적한 후, 가한(可汗) 자리에 올라 거란국을 세웠다. 이윽고 916년에는 중국을 모방하여 황제라 자칭하였다.

야율아보기의 뒤를 이은 태종(太宗, 재위 927~947) 시기에는 오대의 하나인 후진(後晉, 936~946)을 원조하고, 그 대가로 지금의 베이징·다둥 지역에 해당하는 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를 할양받았다. 연운십육주의 영유는 유목 민족 역사에 중대한 전기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만리장성 북방의 유목 국가가 만리장성 이남의 정주 농경 지역을 지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요의 세력은 지속하여 확장하였다. 1004년에는 송을 공격하여 송과 전연의 맹을 체결하였다. 맹약의 주요 내용은 송이 요에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세폐(歲幣)로 지급하는 대신, 요는 송에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요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복 왕조론’과 ‘소수 민족 정권’과 같이 서로 다른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두 관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목 국가<sup>1</sup>가 정주 국가 중국에 흡수·동화되느냐 아니냐에 있다.

미국의 동양사학자 비트포겔은 거란족이 세운 요(遼)를 금(金), 원(元), 청(淸)과 함께 ‘정복 왕조’로 구분하였다. 그는 북방 민족이 항상 중국에 흡수·동화된다는 관점을 비판하고, 문화변용에 따라 제3의 문화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원(二元)통치 체제’를 들었다. 이원통치란 요의 경우, 거란과 해동 유목민에게는 부족(部族)제도를, 한인과 발해인 등 농경민에게는 주현(州縣)제도를 실시하여 유목민과 농경민에 서로 다른 통치를 실시한 체제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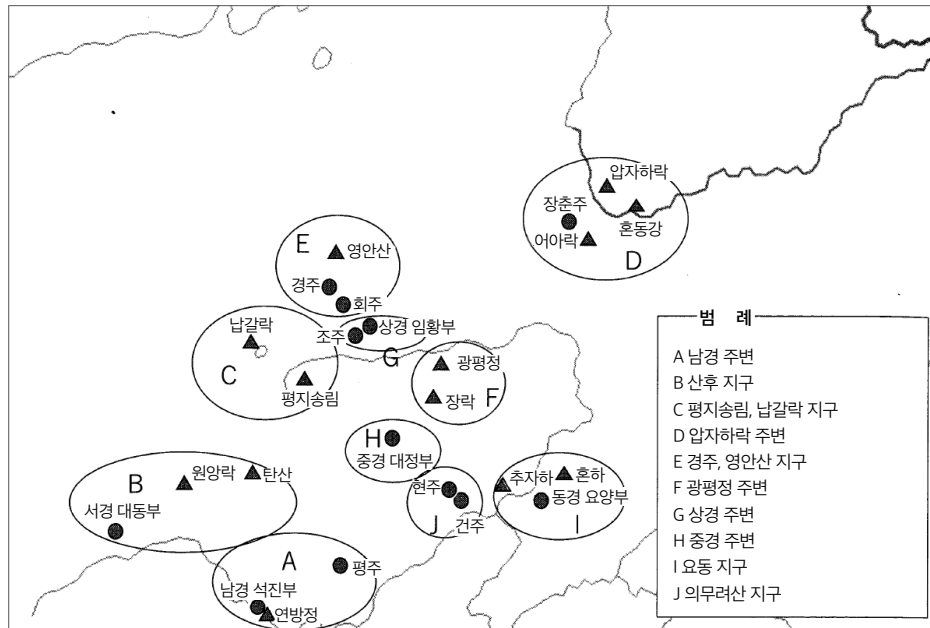
한편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자국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정의하고, 다양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의 국민 국가로 통합되었는가를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국 국내에서 다수의 민족이 더 고차원의 ‘중화민족’에 포섭되었다고 간주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사회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이 제기한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으로 이론화되어 갔다. ‘중화민족’ 개념에서는 중국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민족을 중화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파악하였다. 10세기 이후 요, 서하, 금은 ‘정복 왕조’가 아니라 ‘소수 민족 정권’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중국 국내에서 요에 관한 서술은 송, 서하 등 주변 정권 간 상호 이해 및 교류의 증대를 통한 융합을 강조하고, 민족 사이 갈등과 대립, 정권 간 전쟁과 충돌에 관한 기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목민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요를 과연 ‘소수 민족 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 관점이 타당한지를 요의 국가적 성격과 외교 전략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요의 북방 유목민적 요소인 거란 황제의 행궁(行宮), 부족군(部族軍)의 약탈과 현지 보급 문제, 정기적으로 세폐를 제공하는 남쪽의 정주 국가 송에 관한 외교 자세를 살펴보겠다.

## 2.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요의 ‘정치 중심지’

요 정치의 중심은 ‘도성’이 아니라 ‘이동하는 궁정’이었다. 거란인은 요(遼) 건국 후에 다섯 곳에 차례대로 상경(上京), 동경(東京), 남경(南京), 중경(中京), 서경(西京)이라는 중국적인 도성(都城)을 설치하였다. 정주민 관점에서 볼 때, 거란의 정치 중심지는 도성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렇지만 유목민 출신인 거란 황제

1 유목 국가는 기원전 4세기에 건국한 흉노 제국부터 1757년에 멸망한 준가르 제국까지 강력한 기마병을 바탕으로 중앙 유라시아에 군림하였다. 유목 국가는 준가르 제국 멸망 이후 화기와 철도를 가진 정주 국가와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렇지만 유목 국가는 20여 세기에 걸친 유라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국가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림1〉 거란 황제의 주요 날발 지역<sup>2</sup>

는 유목민의 전통에 따라 계절마다 영지(營地)를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요대 사료에서는 거란 황제가 머무는 곳을 ‘날발(捺鉢)’이라고 하였다.

거란 황제의 유목민적인 이동에는 황제 직속 유목민은 물론, 거란인 관원 전부와 한인 관원 일부가 동행하였다. 그리고 겨울 날발과 여름 날발에서 대정회의(大政會議)를 열고 크고 작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였다. 외국에서 온 사신도 도성이 아니라, 이 이동하는 궁정에서 거란 황제를 알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1〉에서 혼동강(混同江)[D지역], 영안산(永安山)[E지역], 광평정(廣平淀)[F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거란 황제의 행궁은 임의의 지역으로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의 이동과 같이 고정된 복수의 패턴이 있었다. 하나는 동북 루트로, 봄에는 혼동강(混同江)·어아락(魚兒瀾)[D지역], 여름에는 영안산(永安山)[E지역]·납갈락(納葛瀾)[C지역], 가을에는 상경도(上京道) 경주(慶州)의 여러 산[E지역], 겨울에는 광평정(廣平淀)[F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이다. 다른 하나는 서남 루트로, 봄에는 원앙락(鴛鴦瀾)[B지역], 여름에는 탄산(炭山) 혹은 납갈락(納葛瀾)[C지역], 가을에는 탄산(炭山)[B지역], 겨울에는 남경(南京)[A지역] 또는 서경(西京)[B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이다. 이를 통해서 요가 유목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2 高井康典行, 2019, 「契丹[遼]の東北經略と「移動宮廷(行朝)」——勃興期の女眞をめぐる東部ユーラシア状態の一断面」, 古松崇志 외 3인 편, 『金·女眞の歴史とユーラシア東方』, 東京: 勉誠出版, 33쪽.

### 3. 요의 부족군 동원과 ‘약탈’

요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유목 부족을 군대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부족군은 종래 부족장과 부족민으로 구성된 부족 내의 권력 구조가 온존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거란 황제는 말단의 병사 하나하나에까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군대를 동원하는 대가로 각 부족에 ‘재화를 제공’해야 하였다. 이는 정주 국가가 일찍부터 전제 군주제를 발달시켜서 군대 하위 조직에까지 명령을 내렸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부족군을 전쟁에 동원할 때 징집 대상이 되는 부족민은 그들이 사용하는 군사 장비를 기본적으로 자체 조달하였다. 또 원정 시에는 군에 별도로 먹을 식량과 말이 먹을 풀을 지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약탈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를 ‘타초곡(打草穀)’이라고 하는데, ‘목초와 식량을 징발한다[打]’라는 의미이다. 즉 거란 황제가 부족군을 전쟁에 동원하는 대가로 약탈을 허락하는 방식이 자주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042년 증폐교섭(增幣交涉)에서 요 흥종(興宗, 재위 1031~1055)의 부족군 동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



〈그림2〉 오대(五代) 호괴(胡瓌)가 그린 〈북방 유목민이 사냥 나가는 그림(出獵圖)〉(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태종 시대에 할양받은 연운십육주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친다. 959년, 연운십육주 중 관남 10현(關南十縣)을 후주(後周) 세종(世宗, 재위 954-959)의 북벌로 빼앗겼다. 1042년, 요 흥종은 이를 잃어버린 영토로 여기고 회복하려고 송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양국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대신, 교섭을 통해 송이 요에 보내는 비단과 은의 양을 늘리겠다고(增幣) 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였으니, 이를 증폐교섭이라고 한다.

경력(慶曆) 연간(1041-1048)에 요 흥종이 맹약을 파기하려고 하였고, 여러 부족(諸戎)에게 군사 동원을 청하자, 모두 병사를 이끌고 그를 따랐다. 흥종이 여러 부족에게 “획득한 사람, 가축, 재화는 모두 각자 취하라.”라고 약속하였다. 여러 부족(衆戎)이 기뻐하며 밤낮으로 달려서 [송과의 국경 지대인] 남쪽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송과 요가 [다시] 평화협정을 맺어서 [동원하려 한 군대는] 각자 해산하게 되었다. 여러 부족은 모두 성내면서 “우리를 속여서 오게 하였구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크게 [연운십육주의 일부인] 유주(幽州)·계주(薊州) 사이의 십수 현을 약탈하여 돌아갔지만, 거란은 이를 금지할 수 없었다.<sup>3</sup>

요 흥종은 애초에 전쟁에 동원한 부족군에 “획득한 사람, 가축, 재화는 모두 각자 취하라.”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요와 송 사이에 증폐를 통해 화의가 맺어지자, 요 내부의 여러 부족은 전쟁으로 재물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려서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유목 부족에게 정주 지역의 물품 획득이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송에 대한 외교 자세

기원전 4세기에 건국한 흉노 제국 이후, 유목 국가와 정주 국가의 관계에서 기본 전제가 된 것은 상대 측 물품에 대한 수요의 불균형이다. 유목 민족은 예로부터 내륙 아시아 초원 지대에서 양이나 염소, 낙타 등 가축을 몰고 다니며 그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그런데 가축으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물자는 한정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유목 경제에서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유목민은 다양한 물품을 정주 사회로부터 얻어야만 했다. 반면, 정주민 입장에서 유목민이 생산하는 물자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

유목 국가는 정주 국가로부터 물자를 조달하는 데 크게 네 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강력한 기마

3 宋祁, 『景文集』卷44, 「禦戎論」, 篇之二.

군을 동원하여 정주민을 ‘약탈’하는 방법, 둘째 평화로운 관계에서 정주민과 ‘교역’을 하는 방법, 셋째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정주민에 평화를 보장해 주는 대신 ‘공납’을 받는 방법, 넷째 정주 국가를 정복한 후 ‘직접 통치하여 징세’하는 방법이다. 이들 전략 중에서 ‘직접 통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전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유목민의 약탈 행위는 공납의 양을 늘리려는 전략적인 압력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가 1004년 전연의 맹 이후 송으로부터 받는 ‘세폐’는 외부로부터 받는 ‘공납’에 해당한다.



〈그림3〉 송(宋), 저자 미상, 〈경덕사도(景德四圖)〉 중 〈거란 사신이 송 황제를 알현하는 그림(契丹使朝聘圖)〉(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요와 송 사이는 1004년 체결한 전연의 맹 이후 대체로 평화 관계가 지속되었다. 양국은 평화 관계를 지속하고자 정기적인 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요에 사신으로 다녀온 송의 관원은 귀국 후 조정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사요어록(使遼語錄)』이라고 한다. 『사요어록』 중 일부는 송의 사료로 현재 까지 전해져 요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전연의 맹 이후 양국은 비록 평화 관계였지만, 속으로는 상대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송 진종(眞宗)은 전연의 맹을 맺은 직후인 1005년에 “거란의 동정(動靜)은 알지 않으면 안 되니 간첩의 정찰은 옛 제도에 따르라.” 하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조처를 내린 까닭은 송이 거란을 역대 최강의 북방 오랑캐(北狄)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요에서도 마찬가지로 송을 경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요의 한인 관료이자 증폐교섭 때 요의 교섭 담당자였던 유육부(劉六符)가 요 흥종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거란에는 예전에 유육부(劉六符)라는 자가 (……) 일찍이 요 흥종[故廢主]을 위해서 꾀를 내어, “대 요(大遼)가 설령 중국과 평화 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요컨대 10년, 20년마다 반드시 분쟁을 일으켜 저들을 굴복시켜서, 중국에 우리가 겁먹거나 전쟁을 잊어버리지 않았음을 알려 주십시오. 중국이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스스로 세폐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嚚)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곧 대요는 언제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이 있어서 [언젠가] 저들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진언하였다. 지금 저들이 20년 사이에 반드시 특별사절(泛使)을 보내서 조정에 요구

하였는데, [이는] 유육부의 계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이다.<sup>4</sup>

유육부는 요 황제에게 ‘10년, 20년마다 분쟁을 일으켜서 중국에 요가 겁을 먹거나 싸움을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았음을 알리도록’ 진언하였다. 증폐교섭이 끝난 뒤에도 양국 간에는 종종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외교 교섭이 이루어질 때마다 요가 송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협 행동은 요 이전에 존재하였던 유목 국가 군주가 정주 국가로부터 얻는 재화의 양을 늘리고자 취하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정리하자면, 전연의 맹약 이후 요와 송은 기본적으로 맹약을 준수하였지만, 증폐교섭 이후 요가 송에게 취한 자세가 변하였다. 즉, 증폐교섭 이후 요의 송에 대한 외교 자세는 크게 ① 위협 행동과 ② 맹약 준수로 나뉜다. 요는 시의적절하게 외교 자세를 바꾸면서 송과의 외교에 임하였다. 이를 통해 요가 송에게 취한 외교 자세는 기존의 유목 국가가 정주 국가에 취한 ‘군사적인 압력을 동반한 교섭’이라는 외교 전략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거란 황제의 행궁, 요 부족군의 약탈 그리고 송에 대한 외교 자세를 중심으로 거란국[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는 유목민인 거란족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국가로, 남쪽 정주 국가와는 국가가 작동하는 원리가 판이하였다. 또 요와 송 관료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상대국에 대한 경계가 존재하였고, 이것이 때때로 양국 간 분쟁으로 표출되었다. 요는 송과 외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송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교섭에 임하였다. 이는 요가 유목 국가가 정주 국가에 취하는 기존 전략을 계승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 국내에서 요에 관한 서술은 송, 서하 등 주변 정권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증대를 통한 융합을 강조하고, 민족 간 갈등과 대립, 정권 간 전쟁과 충돌에 관한 기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를 중국의 일개 ‘소수 민족 정권’으로 이해하고, 요의 역사를 북방 민족과 한족이 더 고차원의 ‘중화민족’으로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요대의 역사는 북방 유목민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고려 거란 전쟁은 이후 유목 국가와 발생한 접촉 및 충돌의 시초로 볼 수 있다. 13세기에 몽골고원에서 유목 국가 몽골이 재차 흥기하였기 때문이다. 1206년, 테무진은 몽골

4 晁說之, 『景迂生集』卷2, 奏議, 「朔問下」.

고원을 통일하여 몽골 제국을 세우고 ‘칭기스 칸’을 자칭하였다. 그는 유목 부족을 통합하여 강력한 군대로 재편성하였고, 주변 유라시아 지역을 정복하였다. 서하, 호레즘, 금, 남송 등 강력한 정주 국가들은 이 때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혀 멸망하였다. 고려는 1218년 몽골과 처음 접촉한 이래, 양국 관계는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여(著告興)가 살해되면서 파탄을 맞이하였다. 이후 고려는 1231년부터 28년에 걸쳐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된다. 이처럼 고려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유목 국가의 팽창’이라는 격랑을 헤쳐 나간 국가였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참고문헌 |

- [宋] 歐陽修 撰, 2016, 『新五代史』(點校本二十四史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 [宋] 李燾 撰, 2004,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 [宋] 宋祁 撰, 『景文集』, 文淵閣四庫全書本.
- [宋] 晁說之 撰, 『晁迂生集』, 文淵閣四庫全書本.
- 高井康典行, 2019, 「契丹[遼]의東北經略と「移動宮廷(行朝)」——勃興期の女眞をめぐる東部ユーラシア状態の一断面」, 古松崇志 외 3인 편, 『金·女眞の歴史とユーラシア東方』, 東京: 勉誠出版.
- 武文君, 2022, 『遼代部族軍研究』, 合肥: 黃山書社.
- 傅樂煥, 1984, 「四時捺鉢總論」, 『遼史叢考』, 北京: 中華書局.
- 서병국, 1992, 『거란·거란인』, 오정주식회사.
- 토마스 바필드,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 :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 홍성민 편, 2023, 『역주 사요어록(使遼語錄)-사료로 본 거란제국과 발해유민』, 동북아역사재단.
- 洪性珉, 2017, 「遼宋增幣交渉から見た遼の内部情勢と對宋外交戰略——遼の漢人劉六符の役割を中心に——」, 『史學雜誌』第126編第11號.
- Karl A. Wittfogel & Feng Chia-sheng, 1949,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 홍성민 |

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요(遼)와 송(宋)의 외교 교섭사를 주제로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박사(문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재단에서는 북방사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연구 성과로는 『역주 사요어록(使遼語錄)-사료로 본 거란제국과 발해유민』(2023), 「사료의 재검토를 통해 본 高麗 윤관의 女眞征伐」(『歷史學報』 250, 2021)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 제58호**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 제59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제60호**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